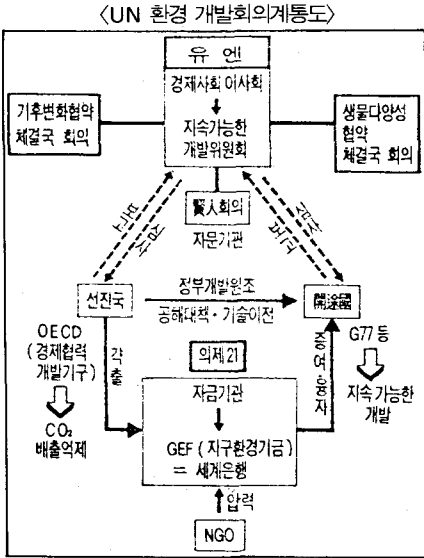


地球(지구)를 위한 27개항 「리우宣言」 채택 행동지침 「의제(Agenda) 21」에 서명

貧·富國間의 南北문제 부각되기도



지구의 위기를 초래한 인류의 횡포를 반성하고 인류가 자연의 하나로서 생존해 가기 위해 원칙을 정한 「환경과 개발

에 관한 「리우」宣言이 6월 14일 오후 1시(한국시간 15일 새벽 1시)에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지난 6월 3일부터 열려 12일간의 공식일정을 마친 地球 Summit(환경과 개발에 관한 UN회의)에서 채택됐다.

역사적인 리우宣言이 채택되면서 세계 110여개국 정상들은 27개항으로 명시된 리우宣言이 채택된 후 열린 서명식에서 이 宣言과 또한 이 선언의 실천 및 행동지침인 의제(Agenda) 21에 동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 후손을 포함해 지구상의 전인류의 공평화(公平化)를 실현하기 위한 「持續 가능한 開發」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각국정부, 국민들이 국경을 초월해서 오직 地球利益(지구보존)을 생

각하면서 행동해야 한다는 역사적인規範이 마련되었다.

리우宣言은 ① 지구규모의 파트너십의 구축 ② 지구상 모든 것에 대한 이익의 존중 ③ 환경과 개발의 일체성 견지 ④ 지구의 불가분성, 상호의존성등을 골자로 한 前文과 27개항의 원칙으로 구성돼 있는데 특히 地球를 「우리들의 집」으로 호칭, 개념을 定立함으로써 지구없이 살아갈 수 없는 영원성을 선언했다.

리우宣言과 의제 21등의 초안에 합의했던 지난 6월 9일 지구서밋 사무국 스트롱(Strong) 총장(에너지협의회보 22호 22면 참조)은 UN 창설 50주년인 1995년까지 이 리우宣言을 地球憲章化시켜야 한다는 의욕을 표시하기도 했다. 12일간에 걸친 이번 회의기간, 선진국

해설 「리우」회의는 당초의 뜻 살렸나?

地球 되살리기 위한 위대한 첫 걸음

변질 됐으나 保畵위한 의무조항 많아

地球 정상회담에서 성안 합의된 다섯 가지 宣言 또는 協約에 대한 평가는 “이만한 合意가 이루어진 것은 큰 성과”라는 긍정적 견해와 “이해관계에 대한 타협으로 알맹이가 빠져버려 본래의 목적을 못 거두었다”는 부정적인 견해로 엇갈리고 있다.

2년전 첫 지구적 규모의 정상회의 준비가 시작될 무렵 이 회의를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근본적 변혁의 장(場)”으로 만들겠다고 하던 「스트롱」(Maurice F.

Strong) 사무총장은 폐막일 하루전에 기자회견을 갖고 “지구가 새로운 방향을 잡고 내디딘 첫걸음”이라는 표현으로 톤이 낮아진 말을 했다. 이런 표현은 이번 회의의 성과를 잘 축약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제까지 지구환경문제는 목소리가 무성했으나 막상 대책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었는데 우선 지구온난화 문제에서 국제사회가 처음으로 공동보조를 취하기 위한 합의에 도달했다.

그러나 CO₂ 배출량 억제목표를 명시하지 못하면서 경제성장의 견지는 명시한 이중성을 배제하지 못함으로써 뜻이 있는 사람들에게 앞으로의 실효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6년 후에 협약 내용의 재검토를 명시하고 있어, 과학적 의문점이 많다고 하면서, 미국이 문제 제기한 온난화 메카니즘의 이론적 공방이 정리되면 그때는 알찬 내용으로 다듬어질 공산이 크다.

알맹이 없는 협약이라고 비판을 받았던 오존층 보호조약(비엔나에서 체결)이 한참 후에 의정서 개정의 형식으로 90년대 중반에 후레온가스 사용 전면금지로 큰 진전을 보인 전례가 없지않기 때문이다.

生物多樣性協約은 기존의 자연보호조

과 개도국은 宣言과, 의제 21등은 물론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금확보문제, 삼림 및 대기보호문제등에서도 사사건건 대립을 보여 기금문제는 선진국 주장이, 삼림보호와 대기보호문제는 당초 취지가 많이 퇴색된 내용으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실무회의와 최초로 각국정상들이 많이 모인 정상회담을 통해서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원칙이 채택됐다는 점에서 지구사적(地球史的)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도 여러가지 이해가 엇갈리는 가운데 이 회담에 참석한 鄭元植 국무총리가 당초의 정부방침을 바꾸어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 협약에 서명함으로써 동참의 폭을 넓혔다고 국내신문들이 보도했다. (뒷면에 이어지는 관련기사 참조)

또한 鄭元植총리는 「비무장지대의 남북공동 생태계조사」를 제의해 각국 대표들의 관심을 끌었다.

〈“인류共有의 지속가능한 開發”을 내걸고 열린 地球서미트 본회의의〉



약 만으로 역부족이었던 열대림, 高山帶 나아가 귀중한 생태계 보호를 위해 처음으로 조약의 틀속에 묶어 놓았다.

그러나 보호대상인 生物種과 그 서식지의 리스트를 만드는 의무조항이 개도국의 반대로 삭제됐다. 따라서 보호대상을 지정할 수 없게 되어 취지를 많이 벗어난 내용이 됐다. 일부 환경보호단체의 비판의 소리는 날카롭다. 다만 모든 나라가 생물의 다양성 보호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는 점은 평가할 만 하다.

온난화문제와 더불어 국제적 대책의 공백지대에 있던 森林보호 문제는 구속력을 갖는 협약의 형식이 아니라 성명형식을 빌린 것처럼 내용에서 개발의 권리만 강조된 꼴이 되어 「보호원칙」의 기능

이 발휘되기는 어렵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선·후진국간에 줄다리기가 격심했던 資金供與문제와 기술이전문제의 틀도가 까스로 마련되었는데 지구환경을 이렇게 망쳐놓은 장본인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선진국인지라 그동안 말로만 인심 써왔던 것에 비해 실행수단이 마련됐다는 것은 진전이라 할 수 있다.

「의제 21」에서 대책이 필요한 환경문제의 방대한 행동계획 항목이 마련되었다. 20년전부터 여러 국제회의에서 채택된 엇비슷한 행동계획들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상태이다. 이번이야 말로 이 행동계획을 어떻게 실천하느냐는 인류를 위시해 全生物圈 공동번영의 존재가 달려있는 것이다 <世>.

言論人이 본 美國의 「앨러지」 症勢

地球서미트에서 각국수뇌가 조인한 5개문서를 겹쳐 놓으면 두께가 4cm나 된다. 2년여에 걸쳐 마련된 조약문서는 英文으로 560쪽, 아마 讀破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딱딱한 문장, 빙빙 돌린 표현, 짙은 관료적 냄새 등 수면제 구실하기에 딱 알맞은 문서다. 어떠한 논의가 있어왔는지 한 예를 들어보자.

21세기를 지향한다는 행동지침 Agenda 21에는 선진국의 개도국 技術移轉 촉진을 표현한 이런 조항이 있다.

“(선진국과 개도국이) 相互合意하는, 特惠的 또는 讓步的 條件을 포함한 有利한 條件으로…” — 무슨 말인지 얼떨떨 해진다. 여기서 콤마(句讀點)가 문제됐다.

콤마는 미국의 주장으로 넣은 것인데 이게 없으면 「相互合意하는」에 걸리는 것은 「特惠的」 뿐이므로 뒤에 이어지는 「讓步的」과 「有利한 條件」에도 걸려야 된다는 것이 미국측 주장. 이에 대해 개도국은 技術移轉에 「相互合意하는」 따위의 條件을 부치다니 말이 되느냐고 반발했다.

이 문제로 두달여 정도 옥신각신하다가 회담도 임박하니 개도국은 제풀에 지쳐 양보했는데 이번에는 다시 미국에서 “이 項 전체를 인정하는 것은 워싱턴의 훈령이 와야 한다”는 지연전술로 완전합의에 나홀이 늦어졌다. 그런가하면 리우宣言,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삼림원칙성명에서 미국은 고립을 자초하는 트집만 잡아나갔다.

이제까지 여러가지 국제무대에서 이상과 정의실현에 힘써온 미국이 막상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자동차 사회구조를 재검토해야…” 등 지적에는 「앨러지」 증세를 일으키는 현상이었다. (발췌, 아사히)

「우리들의 집」을 다음 世代에

이번 「지구서밋」(Earth Summit)은 「리우會議」라고 언론에서 호칭했으나 정식호칭은 「환경과 개발에 관한 UN회의」(The UN Conference on Environment & Development)이다.

이 회의는 「우리들의 집」(地球)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숭고한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내용을 협약했는데 ①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宣言(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 Development) ② 의제 21(Agenda 21) ③ 기후변화 협약(Global Warming Convention) ④ 생물 다양성 협약(Biodiversity Convention) ⑤ 삼림 보전의 원칙 성명(Statement on Forest Principles) 등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리우宣言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 Development) 要旨

〈상황〉 환경보호측면을 강조한 선진국과 개발권리의 보장을 요구하는 개도국이 팽팽히 맞섰다.

〈前文〉 스톡홀름 환경선언(72년)의 재확인·인류의 이익과 환경·개발체계의 범세계적 통합을 위한 국제합의 모색

- ① 인간은 자연과의 조화속에 생산적인 삶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
- ② 각국은 국내자원개발 및 환경개발정책을 추진할 주권을 가지는 동시에 타국의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할 책임을 진다.

- ③ 개발의 권리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요구를 공평하게 충족시켜야 한다.
- ④ 환경보호는 개발과정의 일부이며 분리해서 다룸으로써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 ⑤ 인류 다수의 욕구충족과 생활수준의 격차축소를 위해 각국은 빈곤퇴치에 협력한다.
- ⑥ 환경과 개발에 관한 국제적 활동은 모든 국가의 이익과 필요를 반영해야 한다.
- ⑦ 각국은 지구생태계의 건강성과 통일성을 보존 보호 회복시키기 위해 범세계적 동반자관계의 정신아래 협력해야 한다.
- ⑧ 각국은 생산소비패턴을 감축, 제거해 나가야하며 적절한 인구정책을 추진해야

- 한다.
- ⑨ 각국은 과학기술에 관한 지식 교류와 기술의 개발 채택 확산 이전을 통해 환경보존을 위한 능력을 배양, 강화해 나가는데 협력해야 한다.
- ⑩ 일반시민들에 대해 유해물질 정보등 공공관 보유 환경정보에 관한 접근확대, 환경정책결정과정 참여, 환경에 관한 경각심 고취 등이 이뤄져야 한다.
- ⑪ 각국은 효과적인 환경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환경과 개발이라는 측면에는 환경기준 관리목표 우선순위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
- ⑫ 환경과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국은 개방적인 국제경제체계를 촉진시켜 나가는데 협력해야 한다.
- ⑬ 각국은 환경과피 피해자에 대한 보상 문제를 다루는 국내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 ⑭ 인류건강에 유해한 행위 및 물질들을 타국에 이송하는 것을 막는데 협력해야 한다.
- ⑮ 환경보호를 위해 개별국가의 능력에 따른 예방적 접근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⑯ 각국은 오염자 부담원칙에 의거, 환경보전비용의 국제분담 및 경제적 수단 활용에 노력해야 한다.
- ⑰ 심각한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행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
- ⑱ 타국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재해나 긴급사태발생시 관련국에 통보해야 한다.

리우회의 이 식

指導力 쇠퇴 → 호텔格 低下? 「리우」에서의 부시 美대통령

지구의 정상들이 모여든 루이제아네 이루의 고급호텔은 완전만원 상태인데 부시 美大統領은 6월 12일 새벽에 호텔에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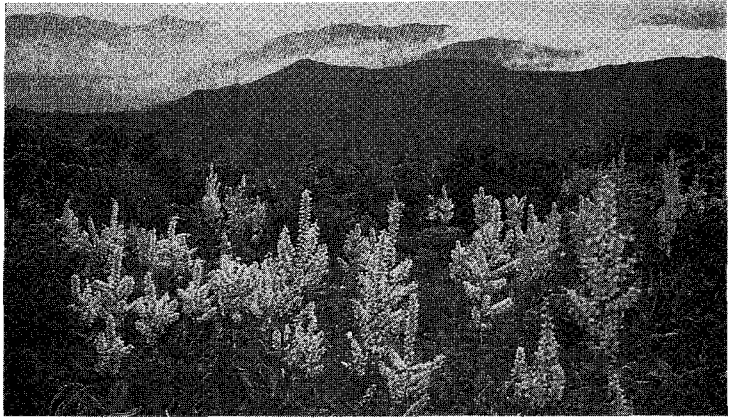
그런데 막상 여장을 푼 곳은 일반손님

투숙레벨의 방. 희망한 맨위층의 「스위트룸」은 이미 쿠웨이트의 자빌國王이 선약을 해냈기 때문.

이들 국가원수들이 묵는 「쉐라톤」 호텔의 최고급방 스위트룸은 1박 955달러이고 이보다 17층 아래 있는 부시美대통령이 묵은 방은 350달러.

미대통령이 리우회의의 참석하네 해서 진통을 겪었기 때문에 호텔 잡는 데도 차질이 생긴 것이지만 호사가들은 “지도력 저하의 반영?” 이라고 입방아를 찧기도(발췌, 아사히).

〈생명체 공동의 번영을위해 보호되어야 할 森林〉



- ⑱ 각국은 국경을 넘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대해 상대방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⑳ 여성의 환경관리 및 개발에 대한 역할이 증대함을 인식해야 한다.
- ㉑ 인류의 장래를 위해 젊은이의 이상, 창조력, 용기를 결집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 ㉒ 지역 선주민의 동질성, 문화, 이익성을 인정함으로써 효과적 참가를 촉구하여야 한다.
- ㉓ 점령지 등 억압지역의 환경과 자원은 보호되어야 한다.
- ㉔ 환경을 파괴하게 되는 전쟁은 억지되어야 한다. 전시 환경보호규정을 담은 국제법은 준수되어야 한다.
- ㉕ 평화, 개발, 환경보존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 ㉖ 각국간 환경분쟁은 평화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 ㉗ 환경관련 국제법 마련을 위해 각국은 상호협조해 나가야 한다.

「議題 21」(Agenda 21)개요

〈상황〉 행동지침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추가제원 조달문제로 난항이 거듭되었다.

- ① 각국은 희소한 천연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폐기물을 줄이며 자원 재활용(리사이클링)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
- ②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질병을 다스리며 노약자를 보호하고 빈곤을 뿌리뽑기 위해 가족계획과 여성의 지위와 교육에 대한 개선을 꾀해야 한다.
- ③ 각국 정부는 환경측면의 고려사항을 모든 정책결정에 통합시키고 에너지의 효율을 증대해야 한다.
- ④ 산림이 보존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사막화의 중단, 산악, 해양, 담수면의 상태계가 기록되어야 하며, 토지를 파괴하지 않고 세계의 농산물 수요를 충

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⑤ 생물학적 다양성은 보호되어야 하며 환경을 해치지 않는 건전한 방향으로 바이오기술이 관리되어야 한다. 각국정부는 유독성 화학제품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유해 폐기물의 처리를 개선하는데 상호협력해야 한다.
- ⑥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설치되는 새로운 UN기구가 「의제21」이 제시한 각종방안을 철저히 감시, 실행하게 될 것이다.
- ⑦ 제 3세계에서 「의제21」을 완전히 실행하는데 따르는 재정비용은 연간 6천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회의 사무국은 추산하고 있다. 1천 250억달러 가량은 원조형태가 되어 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원조액보다 700억달러가 증액될 필요가 있다.

생물 다양성협약(Biodiversity Convention) 개요

〈상황〉 유전학적 자원(Genetic Resource)라는 개념이 채용되었고 미국은 지적소유권 보호가 미흡하다 하여 서명을 거부하기도 했다.

- ① 모든 나라는 자국내의 동식물을 조사하고 위기에 처해있는 생물을 보호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
- ② 개발도상국에 대한 생물조사 및 보호 계획의 실천을 돕기위해 재정지원 메카

니즘을 마련해야 한다.

- ③ 유전공학적 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기술, 연구, 이익은 공유되어야 한다.

기후 변화 협약(온난화 방지 협약/Global Warming Convention) 개요

〈상황〉 온난화가스 감축 時限을 못박으려 했으나 미국과 산유국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EC국가들의 독자적 수행계획에 따라 파급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 ① 모든 나라는 온난화가스의 방출을 억제해야 한다.
- ② 개발도상국에 대해 온난화가스 배출억제를 위한 기술과 재정지원의 메카니즘을 마련해야 한다.

삼림(森林)보전 원칙 성명(Statement on Forest Principle)

〈상황〉 사회, 경제, 문화적 환경과 생태학적 환경의 유지보전을 위해 합의가 이루어져 성명행식으로 나왔다.

- ① 각국은 삼림을 개발할 경우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를 선행해야 한다.
- ② 삼림개발은 국제적 합의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地球 Summit와 더불어 나온 말 말 『』

집 지을 行星 없다면 집이 무슨 소용

이름하여 「UN환경 개발회의」.
「리우」회의로 약칭되는 이 인류사적 국제회의가 6월 3일~14일 까지 「리우 데자네이루」에서 열렸다.
우리나라도 공식 대표단을 보냈다.
'91년 에너지 소비증가율, 1인당 폐기물 배출량, CO₂ 배출 증가율등 많은 부문에서 부끄럽고 무참한 기록을 안고 「리우」로 떠난 우리 대표단의 처지가 안쓰럽기만 하다.

어째서 이 지경이 되었는가. 우리가..

“집이 다 무슨 소용이겠는가. 그 집을 갖다 세울 行星이 없다면...”

웁은 말이다.

太陽을 中心으로 地球가 속해있는 行星들을 太陽系라 했다. 이 태양계도 銀河水 한끄트머리의 蟲樣突起에 불과하다. 이러한 엄청난 은하수가 또 몇만개나 더 있는지 인간의 능력으로는 상상조차 못하고 있다.

人間的 존재가 무엇인가 새삼스레 생각해 된다.(발췌 : 한국경제)

人口폭탄 뇌관제거 여성교육확대로

세계인구가 60년 안에 지금의 3배인

160억으로 증가, 앞으로 人類는 쥐떼처럼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리우회의에서 한 해양학자가 인구폭발의 무서움을 경고했다.

60년대 말 「인구폭탄」이란 名著를 낸 미국의 「폴 에리히」교수는 당시 지나치게 비관적 견해라는 비판을 받던 그 책의 내용이 오히려 낙관적이라고 생각될 정도라고 최근 밝혔다.

오늘날 문제되고 있는 환경파괴의 다른 요인들이 미처 예견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에리히」교수는 인구폭탄의 뇌관제거를 위해 출생률을 낮추거나 반대로 사망률이라도 높일 것을 주장한다. 또 그는 女性교육의 확대와 男女平等의 고취야말로 출생률 저하의 가장 효과적 방법이라고 그는 말한다.

인구폭발이 지구온난화 현상을 촉진 시키는 알려진 사실이다.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려 숲을 경작해 산소공급원을 줄이는 대신 연료소비는 더욱 급증, CO₂ 방출이 인구 비례로 무한정 늘어나기 때문이다. (발췌 : 한국일보)

美·日·브라질의 汚染源 정도는?

세계사적 「리우」회의가 브라질 「리우 데자네이루」에서 열렸다.

그러면 대표적 선진공업국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진국으로 꼽히는 브라질의 오염원정도는 어떠한가? 흥미있는 비교를 일본 「아사히」신문이 내놓고 있다.

... 지구상 모든 나라 총면적에 대한 점유비는 美 6.9, 日 0.28, 日 6.3. 인구는 브를 1로 할 때 日 0.8, 美 1.7 별로 차가 없으나 국민 總生産에서는 日 1, 日 7.8, 美 14.0. 자동차 보유대수 日 1, 日 4.4, 美 15.3으로 사이가 많이 벌어진다.

... 1차 에너지 소비량(석유환산)을 개산해보면 日 1, 日 4, 美 20을 넘는다. 연간 후레온가스 사용량 日 1, 日 6, 美 20이고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은 日 1, 日 2, 美 3이다.

이렇게 놓고 볼 때 나라의 크기나 경제적 생활의 내용에 차이가 많음을 알 수 있고 이것을 더욱 낮은 수준에 있는 개도국과 비교한다면 그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다.

리우회의에서 이상을 실현하기에 앞서 현실의 문제에 부딪쳐 서로 줄다리기와 옥신각신이 있었던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 이제까지 환경파괴의 8할은 선진국의 책임이라고 개도국은 생각한다. “선진국들이 자기들의 발전을 억제해서라도 가난한 나라의 개발을 도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원인은 富를 누리



비디오 演說 거절 당한 日 미야자와 首相

UN평화유지활동(PKO)과 지구환경 보호

둘다 일본이 입만 열면 강조하고 있는 「국제공헌」의 핵심 부문이다. 정치대국

을 지향하는 일본으로서 풍부한 돈을 바탕으로 세계무대에서 얼마든지 큰소리를 낼 수 있는 분야이다.

한데 미야자와 (宮澤喜一) 일본총리 만큼 요즈음 바빠고 피곤한 국가원수도 세계에서 드물다. PKO법안을 둘러싼 국회공방으로 밤을 꼬박 새는가 하면 지구 건너편에서 열린 지구서밋에도 계속 신경을 써야했기 때문이다.

그는 브라질에 가고 싶어했다. 하지만

PKO법안 등으로 불가능해지자 위성을 이용한 TV연설로 대신기로 했다. 그러나 여지없이 거부당했다.

표면적으로는 「부트로스 갈리」유엔사무총장의 말처럼 『일본만을 특별대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데 반대 이유였다.

돈줄을 쥐고있는 일본은 향후 5년에 걸쳐 9천억엔에서 최고 1조엔을 공공개발원조금으로 내기로 했고 그정도의 성

기위해 환경파괴를 일삼아온 바로 거기
에 있다.

“꼭 채운 쓰레기통, 개도국 책임 아니다”

냉전체제 종식으로 앞으로 국제의
교의 핵심은 군사적문제에서 환경문제로
바뀌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리우」회의 개막 첫날의 각국대표 발
언은 대체로 지구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막으려면 개도국들이 지구환경을 훼손하
지 않고 경제개발을 할 수 있도록 선진
국들이 재정과 기술을 지원해야 하며 아
울러 그들의 소비및 생산방식에 대한 전
반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들.
“우리가 쓰레기통을 꼭 채웠으니 그
것을 비우는 데 도와줘야 겠다고 제3세계

국가들에게 말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노르웨이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그동안
지구환경을 훼손하면서 富를 축적한 선
진국들의 속죄의 목소리로 들렸다.

“만일 부자나라들이 가난한 나라들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해 주기를 거부한다면
貧國들은 환경을 구할 수가 없다.” 파키
스탄 환경장관의 이 발언은 제3세계 국
가들이 선진국들을 상대로 「환경」을 무
기화하겠다는 협박처럼 들린다.

이러한 국제무대의 실정은 벌써 환경
문제가 현재의 지구적 현안문제임을 입
증해주는 대목이며 이번에 여러군데서
발을 빼보려는 작태를 보인 미국에게 비
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앞으로 어느 나라가
환경지도국으로 등장할 것인지 주목된
다. (발췌: 동아일보)

〈길이 1m의 테이블이 100m이상 연결돼 있는 리우 會議 정상회담장〉



의표시면 충분하리라 생각했다. 세계 각
국도 이해해 주리라 믿었다.

그러나 6월13일 회의에 참석한 일본
정부 대표단은 5번째로 예정된 총리의
연설이 스크린에 나타나지 않아 크게 당
황했다.

일본식의 사고방식이 세계의 「상식의
벽」에 부딪친 것이다.

세계각국은 일본이 국제무대에서 그
들의 주무기인 「돈」과 「첨단기술」을 늘

앞세워온 것을 못 마땅해 왔으나 이번
에는 특히 그 역사적 의의를 아무리 강조
해도 지나치지 않는 지구환경개발회의를
경시한 「교만한 대처」에 선진국 개도국
모두가 분노한 것이다.

이들은 「비디오 연설을 위성으로 보낼
수 있는 자금과 기술을 가진 나라와 그
렇지 못한 나라 사이에 커다란 불공평을
초래한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한쪽
에서는 「다른 나라의 수뇌들도 모두 어려

「약속의 땅」 韓半島 비무장지대

鄭元植국무총리가 리우회의에서 韓半
島 「비무장지대의 南北 공동 생태계 조
사」를 제의했다.

DMZ(비무장지대)는 조국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512km 넓이의 「陸地속의 孤
島」이다. 서리서리 분단의 한이 맺히고
겨레의 통곡이 스민 침묵의 철조망...
그안에 지금 어떤 생태계의 현실이 존재
하는 것일까.

그곳은 비록 뼈아픈 격전지요 戰痕이
깃든 곳이지만 別有天地임엔 틀림이 없
다.

1차대전 때의 西部전선, 1평방인치 땅
을 빼앗기 위해 死者 1만명의 희생과 포
탄 1만5천개 이상을 퍼부었던 땅이다.
여기에 2차 대전후 프랑스 山林廳이 대
규모 복구사업을 벌여왔지만 상채기를
깨끗이 씻어내지 못했다. 아직도 베르
(Verdun) 市 부근은 1차대전이 끝난지
70년이 넘었는데도 풀 한포기 안자란다.
무서운 전쟁의 뒤끝이다.

다행히 뒤늦게나마 DMZ에 대한 생태
계 조사가 南北공동으로 이루어진다면
통일의 빛장을 여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그곳은 신관 「出埃及記」—겨레의 비
원이 서린 「약속의 땅」이다. (발췌: 한
국경제)

운 국내문제고 고민하고 있으면서도 무
리를 해서 참작했다. 부시 美대통령도 어
려운 선거기간에 왔다. 일본은 돈만내면
끝이라는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
는것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발췌:
한국일보)